

# 靑 “이런 일 없어야...사면 언급 부적절”

### 박근혜 형확정에 “불행한 사건 역사적 교훈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 구현”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향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든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은 정치 논쟁에 선불리 휩싸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론에 이재명 “국민 수준 무시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물러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울리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 핵심부 의견에 반박하는 차원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사는 연일 전 국민 지급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여러분 같은 1인당 20만~30만원 지급했다고 방역지침을 여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느냐”며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다.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자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추진 배경을 짐작했을 뿐,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날 형이 확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선 “사면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다.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앞서 이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대화하며 이동하는 이재명 지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왼쪽)가 더불어민주당 김태원 원내대표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총리 “이익공유제 자발적으로 해야”

### “공매도, 좋지않은 제도”... “셀트리온 치료제 2월초 허가날 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여권 일각의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입법화 논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법, 제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 상생 정신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와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오는 3월 15일 만료하는 ‘공매도 금지’ 조처의 연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사견을 전제하며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 생각한다. 원래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정부

생각과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순 없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심사 중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관련해선 “사용 허가가 아마 2월 초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면 치명률이 높아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여의도 클럽

### 서삼석 ‘팬생이모자반’ 피해 예방 간담회 열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 무안신안)은 14일 최근 발생한 팬생이모자반 피해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등 3개 기관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박준영 차관, 해양경찰청 김홍희 청장, 수협중앙회 강신숙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팬생이 모자반의 출현에도 아직까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팬생이 모자반이 양식장 및 해안가로 유입되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해양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를 통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해수부,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차관은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정선과 어항관리선의 특성에 맞게 활용도를 높이며, 해양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고안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홍희 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예상 시 관계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내륙으로 유입되기 전에 바다에서 바로 방제를 통한 수거 등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 이용빈 “이런 치욕스런 일, 다시는 없어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헌정사에 두 번 다시 이런 치욕스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는 모습을 보여도 부족한 상황임에도 박 전 대통령은 끝내 하지 않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실망과 분노를 느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면서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은 지 4년이 지나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큰 오점인 전직 대통령의 총체적 국정농단 이 결말이 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고,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속죄하고 참회

이 의원은 또 “국민들은 회대의 국정농단 사건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역사의 죄인으로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김진수기자

### 이형석 “새마을금고, 금융당국 직접 감독해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 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새마을금고는 예금 대출 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20조 39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

이형석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 기준을 적용해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급매 전문**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웃음꽃 활짝 핀 날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즐거운 부동산 대표 유재관 올림

---

**[급구]**

- 광주시내 빌딩급구(가부간 1주일내 결정)
- 전남북 관내 농지및임야

== 조건 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토지보상금들고 대기중입니다)

---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기입구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 370-1900 ☎ 010-2006-0115

〈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 광주지역 매매 임대물건 구함 〉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